

# 교육격차와 사회통합

Education Gaps and Social Integration



김희삼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 연구위원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교육격차'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은 기회·과정·성과 면에서 상당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 간 교육환경의 격차는 학업성취도의 지역 간 격차로 귀결되고 있음.

사교육 시장은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데, 외환위기 이후 벌어진 계층 간 소득격차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교육의 양과 질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재 교육격차의 핵심임.

교육격차 문제에 대한 선결과제는 기존의 공교육과 사교육이 모두 돌보지 못했던 학생들에 대한 책무성을 회복하고, 어떤 부모를 둔 학생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 기초학력과 같은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교육영역에서 국가적 최소기준을 달성하는 것임.

## 1. 교육격차 –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교육문제

우리사회에서 교육은 사회통합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2009. 2. 23)에서처럼 교육이 "지적인 능력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가짐, 튼튼한 체력, 풍부한 예술적 감수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진정한 목표'를 달성한다면 교육은 그런 '이상형 인재'들을 사회구성원으로 길러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설령 교육이 이상형 인재의 양성보다는 주로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더라도, 교육기회가 개인적 배

경과 상관없이 고르게 주어지고 있다면 교육은 사회의 계층 간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교육과 사교육의 합작생산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이상형 인재가 길러지고 있다는 데 동의하기는 어렵다. 또한 부모의 경제력이 사교육을 매개로 다음 세대의 학력과 경제력으로 전이되어 교육이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통로 구실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더욱이 우리사회에서 교육문제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과 고통을 호소하고, 저마다 나름의 의견이 있고, 의견끼리 격심하게 대립하는 이슈도 없을 것이다. 교육이 오히려 사회갈등의

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라도,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교육문제를 우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교육문제는 다양한 차원과 복잡한 층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주된 문제’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상반된 정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 예컨대 교육문제를 최대한 단순화하여 ‘비효율’의 문제와 ‘불평등’의 문제로 대별해보자. 투자에 비해 성과가 부실하다는 점에서 교육의 비효율성을 주시하는 쪽과 교육의 기회·과정·성과 면에서의 불평등을 주시하는 쪽은 상당히 다른 처방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똑같이 비효율성을 문제 삼더라도 비효율이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와 비효율을 없애기 위한 개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상당히 다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육문제는 비효율보다는 불평등에 무게를 실게 되는데, 그 핵심은 ‘교육격차’라고 할 수 있다. 교육격차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국민의 권리(헌법 제 31조 1항)를 실현하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sup>1)</sup> 본고에서는 이해영·강태중(2004)을 따라 교육격차를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격차,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과정에서의 격차, 그리고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의 격

차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sup>2)</sup>

비단 우리나라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교육격차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나타나는 계층 간 격차 외에도 지역 간 불균등발전이 반영되어 거주지(서울 및 수도권 대 지방)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 간 격차의 형태로도 드러난다.<sup>3)</sup> 아래에서는 우리사회의 교육격차를 계층 간 격차와 지역 간 격차로 대별하고, 기존 연구 및 조사에서 밝혀진 교육격차의 현황을 살펴본다. 이어서 교육격차의 의미 및 이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점들을 논의하고 교육격차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 2. 계층 간 교육격차의 현황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대부분 평준화가 유지되고 있지만, 어떤 고등학교를 진학하는지는 부모 경제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 부모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학생의 52.1%는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반면, 부모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비율이 6.9%에 불과했다.<sup>4)</sup> 2007년 한국교육종단연구 조사에서 중학교 3학년생에 대해 담임교사가 경제적 여건을 사유로 특정한 진학지도를 했을 때의 77%가 전문계 고등학교를 권유한

경우였다. 반면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에 진학하는 학생의 부모는 평균보다 높은 경제력을 갖고 있다.<sup>5)</sup>

고등교육 진학률이 80%를 넘어섰지만(2008년 83.5%) 부모의 학력·직업·소득에 따라 자녀의 고등교육 기회도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한국노동패널 6차연도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률은 부모의 학력(중졸 이하 3~4%, 대졸 28%, 대학원졸 41.4%)과 직업(농어업·기능근로·단순노무 6~8%, 고위임직원·전문직 33%)에 따라 큰 차이가 났다. 또한 자녀의 대학 진학 유형에 따른 가구주 월평균 소득은 미진학자 131만원, 전문대학 진학자 146만원, 지방 소재 4년제 대학 진학자 190만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자 247만원으로 단계적 차이를 보였다.<sup>6)</sup>

한편 부모의 교육지원 측면에서 계층 간 교육격차는 가구소득별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로 분명하게 드러난다. 전국 275개 초·중·고교의 학부모 약 34,000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2008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75.1%이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3000원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sup>7)</sup> 그런데 월소득 700만원 이상의 가

구는 91.8%가 사교육에 참여하며 1인당 월평균 47만4000원을 지출하는 데 비해,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구는 23.3%가 사교육에 참여하며 1인당 월평균 5만4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8)</sup> 즉,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받을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뿐 아니라, 보다 고액의 사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입시 사교육이 허용되고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자녀의 명문대 진학률 격차는 확대되었고, 교육을 통한 빈곤 탈출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입학생의 가정환경 변화를 조사한 결과, 고소득직군 아버지를 둔 자녀의 입학 비율이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1985년에는 1.27배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16.6배로 늘어났다.<sup>9)</sup> 김대일(2004)은 빈곤층 가구가 빈곤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날 확률은 6%에 불과하고, 소비 기준 하위 10% 계층의 교육비 지출액은 한 달 10만원 수준인데 반해 상위 10% 계층은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빈곤층의 낮은 교육비 지출은 빈곤 탈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sup>10)</sup>

1) 김태중, 교육격차와 교육복지정책, 설광언 외,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대응한 사회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06.  
 2) 이해영·강태중,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학교와 타지역 학교의 교육격차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4.  
 3) 물론 지역 간 평균소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역 간 격차는 계층 간 격차를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을 것이지만, 거주지를 통제한 후에도 계층 간 격차를 발견한 연구나 부모의 학력 또는 소득을 통제한 후에도 지역 간 격차를 발견한 연구는 두 가지 차원의 격차가 상호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각각 그 자체로도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4) 강영혜 외,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부문의 과제와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2005.

5) 예컨대 2005년 1/4분기 도시 근로자 월평균 가계 소득이 약 330만원이었던 데 비해, 민속사관고 학생의 경우 6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부모가 70.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주후 외,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시범 운영 평가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2005).  
 6) 강영혜 외, 앞의 글.  
 7) 학교급별로 보면,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87.9%), 중학생(72.5%), 일반계 고등학생(60.5%), 전문계 고등학생(30.3%) 순이었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24만2천원), 중학생(24만1천원), 일반계 고등학생(24만9천원)이 비슷하고 전문계 고등학생(6만9천원)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8) 교육과학기술부, 2008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및 대책, 2009, 2, 27.  
 9) 김광역 외, 입시제도의 변화: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4, 1.  
 10) 김대일, 빈곤의 정의와 규모, 유경준·심상달 편,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4.

표 1.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만원, %, %p)

구 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			사교육 참여율 (% , %p)		
	2007	2008	증감률	2007	2008	증 감
전 체	22.2	23.3	5.0	77.0	75.1	-1.9
100만원 미만	5.3	5.4	1.9	36.9	34.3	-2.6
100~200만원 미만	10.7	10.8	0.9	59.7	55.3	-4.4
200~300만원 미만	17.7	17.7	0.0	77.0	73.7	-3.3
300~400만원 미만	24.1	24.5	1.7	84.4	82.2	-2.2
400~500만원 미만	30.3	30.6	1.0	89.2	87.2	-2.0
500~600만원 미만	34.4	35.6	3.5	90.5	89.7	-0.8
600~700만원 미만	38.8	40.2	3.6	92.7	90.5	-2.2
700만원 이상	46.8	47.4	1.3	93.5	91.8	-1.7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8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및 대책, 2009. 2. 27.

계층 간 학업성취 격차를 조사한 김경근 (2005)은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과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의 수능점수는 평균 50점 가까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수능점수는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체계적인 차이가 나서, 월소득 200만원 이하는 288점, 201~350만원은 293점, 351~500만원은 310점, 500만원 이상은 318점으로 조사되었다.<sup>11)</sup> 이처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은 기회·과정·성과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3. 지역 간 교육격차의 현황

평준화의 틀 안에서도 공교육 여건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농어촌 학교의 약 5분의 1은 학급 수 6개 미만, 학생 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이며, 한 학년 당 한 개 학급 운영이 어려워 복식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의 대부분도 농어촌에 있다. 또한 지역 내 고등학교가 부족해서 인근 도시나 대도시로 유학을 가야 하는 읍·면도 있다.

사교육 접근 기회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 학생 1,000명당 입시·보충학원 수가 전국 평균 2.7개인 데 비해 서울은 3.3개, 특히 8학군(강남·서초·송파구) 지역은 5.2개로 전국 평균의 2배 정도이다. 또한 <표 2>를 보면 서울이 읍·면보다 사교육 참여율이 15%p 더 높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17만원 더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급

표 2. 지역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구 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			사교육 참여율 (% , %p)		
	2007	2008	증감률	2007	2008	증 감
전 국	22.2	23.3	5.0	77.0	75.1	-1.9
서울	28.4	29.6	4.2	80.6	79.1	-1.5
광역시	22.0	22.8	3.6	79.0	76.6	-2.4
중소도시	22.8	24.2	6.1	77.5	75.8	-1.7
읍면지역	12.1	12.5	3.3	66.4	64.0	-2.4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8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및 대책, 2009. 2. 27.

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지역 간 교육환경의 격차는 학업성취도의 지역 간 격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은 4년제 대학 입학생이 진학한 학과의 평균 수능백분위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출생지, 14세 성장지, 고교 소재지의 지역 더미변수들을 차례로 설명변수로 사용한 세 가지 회귀분석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지역 더미변수들의 계수추정치를 이용하여 서울을 비교대상으로 했을 때 지역별 수능점수 차의 내림차순, 즉 지역별 수능점수의 순위로 각 열을 정리했다.

수능점수를 기준으로 본 학력은 서울과 인천의 학력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고, 외국의 경우에는 서울보다도 높았다. 대전·대구, 경북·강원은 서울과의 수능백분위점수 차이가 3점대 이내에 머물러 중상위 그룹을 형성했으며, 경기·경남·울산·충남·부산은 서울보다 수능백분위점수가 4~5점 가량 낮아 중하위 그룹을 형성했다. 충북·제주·광주·전남·전북은 고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할 때 서울과의 수능백분위점수 차이가 6점 이상 벌어지는 하위 그룹을 형성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지역 간 이동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지역의 초·중·고등교육 환경은 개인이 환경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수능점수가 대입 및 향후 취업에 미치는 상당한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지역 간 평균 수능점수의 차이로 나타나는 학력 격차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 4. 교육격차의 의미와 과제

공교육의 영역에서 균등한 교육기회의 이념은 양적으로는 상당히 달성되어 왔다. 해방 이후 초·중·고등교육, 중·고등교육 순으로 교육기회가 확충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차례로 평준화되고, 대학설립이 용이해지고, 초·중·고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가 무상교육으로 전환된 것도 교육기회의 균등화가 정책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국 단위로 치르며 그 결과에 따라 일생이 좌우되는 대입수능시험의 존재는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이를 준비하려는 필사적인 경

11) 김경근,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2005.

표 3. 수능백분위점수의 지역별·성장단계별 격차

(1)			(2)			(3)		
출생지	수능 점수차	(t-값)	14세 성장지	수능 점수차	(t-값)	고교 소재지	수능 점수차	(t-값)
외국	5.09	(1.73)	외국	7.24	(3.44)	외국	-	-
서울	0.00	(기준)	서울	0.00	(기준)	서울	0.00	(기준)
인천	-0.95	(-1.06)	인천	-1.11	(-1.37)	인천	-0.86	(-1.06)
대구	-2.12	(-3.20)	대전	-2.98	(-3.77)	대전	-2.91	(-3.79)
대전	-2.40	(-2.65)	대구	-3.05	(-4.80)	대구	-3.09	(-4.87)
강원	-2.86	(-3.66)	경북	-3.36	(-4.87)	경북	-3.15	(-4.49)
경북	-3.24	(-5.21)	강원	-3.65	(-4.25)	강원	-3.62	(-4.21)
경기	-3.26	(-5.48)	경남	-4.04	(-6.74)	경기	-4.09	(-8.09)
울산	-3.56	(-3.82)	경기	-4.08	(-7.91)	경남	-4.13	(-6.88)
부산	-3.90	(-7.41)	울산	-4.63	(-5.23)	울산	-5.07	(-5.72)
충남	-4.02	(-5.51)	충남	-4.78	(-6.04)	충남	-5.39	(-6.62)
경남	-4.04	(-6.94)	부산	-5.09	(-9.35)	부산	-5.42	(-9.85)
충북	-4.95	(-5.84)	제주	-5.92	(-4.12)	충북	-6.37	(-7.53)
광주	-6.29	(-8.34)	충북	-6.24	(-7.49)	제주	-6.48	(-4.50)
전남	-6.41	(-10.33)	광주	-7.54	(-11.30)	광주	-7.81	(-11.97)
제주	-6.62	(-4.67)	전남	-7.95	(-11.30)	전남	-7.86	(-10.67)
전북	-11.29	(-16.54)	전북	-13.06	(-18.08)	전북	-12.92	(-17.87)

주: 각 회귀분석에서 응답자의 성별, 연령, 입학연도, 부모의 교육연수를 통제함.  
 자료: 2006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4년제 대졸자 표본) 및 진학사 수능점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필자가 계산(김희삼, 지방대학 문제의 분석과 시사점, KDI 정책포럼, 2009 참조).

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남보다 먼저 대입을 준비시키려는 욕구는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경쟁을 과열시켰고,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학교에 보내려는 욕구는 고교 입시를 상당부분 부활시켰다. 이처럼 사교육 시장은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데, 외환위기 이후 벌어진 계층 간 소득격차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교육의 양과 질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재 교육격차의 핵심이다.

그런데 교육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

녀에게 대물림되는 정도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주는 정도와 자녀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소득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필자의 분석 결과, 부모의 경제력은 자녀의 교육연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교육연수에 따른 한계수익률은 학력단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부모는 고학력 자녀 만들기에 노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세대 간 소득 탄력성 중 절반 내외는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교육수준을 통해 자녀의 소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sup>12)</sup>

이처럼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에 따른 교육격차가 자녀 세대의 소득격차로 귀결되는 대물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교육수준에 따른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를 대폭 줄인다면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로 연결되는 고리를 차단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경우 부유한 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 대신 직접적인 부의 이전을 선호할 것이다. 또한 지식기반 경제에서 숙련이나 지식에 대한 보상이 커지는 현상을 정책을 통해 되돌리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지가 자녀의 교육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는 정책을 추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교육 경쟁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1980년 7월 30일 이후 과외가 전면 금지되었던 시절을 회고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외교육 금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0년 4월 27일)에 반하여 사교육 수요를 강제로 억제할 수단은 많지 않다. 또한 교육이 공공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양한 교육서비스의 생산과 구입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이 사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어렵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교육정책의 엄연한 본령은 공교육이다. 일부 학교에서 교장의 추진력과 교사들의 변화 노력에 힘입어 학교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진학성고가 개선된 사례가 최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학교 교육이 스스로 입시경쟁력을 높여 민간의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것은 입시제도

와 교육과정이 현재의 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는 일단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교육을 통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임무는 어떤 부모를 둔 학생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 기초학력과 같은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교육영역에서 국가적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을 달성하는 것이다. 현재 사교육 시장에서 주로 제공되는 것은 대학입시에 맞춘 일종의 기능교육이지,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보충교육이나 부적응학생을 위한 배려는 아니다. 공교육은 사적 시장에서 생산되지 않지만 사회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격차 문제에 대한 공교육의 선결과제는 기존의 공교육과 사교육이 모두 돌보지 못했던 학생들에 대한 책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접근방식은 다르지만 참여 정부의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나 현 정부의 전국적 학업성취도 조사를 통한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 중점지원' 방침은 이런 점에서 유사한 취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간 학력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학생의 지역 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초중등교육 과정에서는 지역의 교육환경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지역 간 사교육 환경의 차이를 공교육에서도 재현해서는 안 된다. 지역 간 학령인구 증감의 불균형에 따라 유휴교사를 시도 간에 재배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 지역별로 단순히 양

12) 김희삼, 한국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과 교육의 역할, 제10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009.

적인 교사 수요만 고려하지 말고 지역 간 학력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에 우수한 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는 공교육의 입시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일정부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나, 본질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입시경쟁이 존재하는 한 추가적인 사교육을 통한 순위 상승 욕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교육 시장에서 명문대 진학을 겨냥한 고액의 과외교육이 성행한다면 그것은 명문대 진학의 기대수익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민간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투자행위로 볼 수도 있다. 만약 천부적 능력이 뛰어나 교육투자의 한계수익이 높지만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이 있어 형평성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문제가 된다면 교육비용 자기회를 대입 이전 단계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차입 제약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부분적으로 보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글을 맺기 전에 몇 가지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OECD PISA 자료를 이용한 교육격차의 국제비교에 의거해 볼 때, 우리나라의 교육격차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편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sup>13)</sup> 다만, 수능시험 중심의 대입제도와 학벌주의 때문에 크지 않은 성적 차이가 인생 경로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교육격차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를 높이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격차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는 교육문제의 중심을 차지하지만, 우리사회의 교육문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형평성 못지않게 효율성의 문제가 시급하다. 우리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지적되는 교육개혁도 과도한 사교육비와 학습시간에 비해 낮은 교육성과를 보이는 교육투자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똑같이 돈과 시간을 쏟게 되더라도 보다 나은 교육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입시제도와 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셋째, 앞서 선행연구와 자료를 통해 소개한 교육격차의 현황은 주로 현상적으로 관찰된 결과 지표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해석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모의 소득이나 거주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모의 능력은 상당부분 유전을 통해 자녀에게 이전되는데, 이로 인한 자녀의 학력 및 소득 차이까지 인위적 개입을 통해 제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통합을 위해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은 환경적 요인이 만들어내고 심화시키는 격차를 보정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정책적 개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구축과 엄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믿을 보다는 믿을 수 있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추진 관행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문건복**

13) 김태중, 앞의 글 참조.